

“못 버텨” 광산구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병가 9배 급증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괴물폭우’로 인한 수해 등 재난 상황이 잇따라 터지면서 올해 광산구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들이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 병가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올해 1~9월 시민 안전과 직원들의 병가 사용 건수는 23건(1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6명)에 비해 64.3% 증가한 것이다.

총 병가 사용 시간은 전년 86.5시간에서 올해 768시간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1인당 평균으로는 14.4시간에서 76.8시간으로 5.3배 상당 급증했다.

특히 하루나 이틀 단기 병가 위주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장기 병가가 유독 많았다. 3일 이상 병가는 작년 2명 뿐이었지만 올해는 4일 1명, 6일 2명, 25일 1명, 48일 1명 등 5명으로 늘었다.

광주 다른 자치구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병가 사용이 감소한 것과도 대비된다.

동구 주민안전담당관 직원들의 병가 사용은 지난해 19건(1인당 평균 2.9일)에서 올해 16건(0.8일)으로 줄었다. 서구 안전총괄과 43건(6일2시간)→18건(2일), 남구 안전총괄과 96건(5.7일)→88건(5.9일) 등이다. 북구 안전총괄과는 59건에서 74건으로 늘었지만 총 사용일은 95.4일에서 60.1일로 오히려 감소했다.

광산구의 병가 사용 증가는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지원부터 대형화재와 수해 등 각종 재난이 잇따르면서 담당 공무원 피로도가 누적된 게 원인으로 꼽힌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난 불이 수일간 이어지면서 화재 현장을 지키거나 이재민 지원을 업무에 위해 며칠간 밤잠을 설치다.

곧이어 일강수량 426.4mm 폭우가 쏟아져 어룡동·삼도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현장 대응을 비롯해 하루 수십건의 재난 신



지난 5월 17일 오전 7시11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불이나 소방 당국이 불을 끄고 있다. 이날 불은 타이어 생산에 필요한 고무를 정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뉴스

금호타이어 화재·괴물폭우... 잇단 재난에 ‘피로 누적’ 올해 1~9월 병가 23건 총 768시간... 장기 병가 늘어 李 대통령 “엄정 책임” 발언에 부담·스트레스 가중 “전문성·책임 비해 보상 적어, 방재안전직 확충 시급”

고와 사유재산 피해 접수로 여름휴가도 제대로 갈 수 없었다.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면서 재난업무 담당 공무원들 역시 업무가 몰렸다. 산업단지 개발 밀집 지역 특성상 산악현장 화재·인명 피해 등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지 않아 타 자치구 대비 업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 책임’ 발언도 현장 부담을 키웠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예방 가능한 재난·사고가 부주의로 발생하면 엄

정히 책임을 물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공직자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 이후 재난 관련 업무 공무원들 사이에서 ‘실수 한 번이면 끝난다’는 불안이 커졌고, 책임 강화로 심리적 압박이 심화됐다.

광산구 한 공무원은 “언제, 어디서 사고가 터질지 몰라 밤잠을 설치는 날도 많다. 재난·안전 관련 업무가 중요해지면서 압박감이 커졌고 스트레스도 극심하다”며 “재난·안전 업무는 모든 직원들이 기피하고 있다. 도저히 못버틸겠다”며 보직을 바꿔달라거나 눈물을 터트리는 직원들도 있

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장기간 근무하고, 근무 성적 가산점과 수당을 지급하는 ‘전문직위’ 역시 재난·안전 담당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현재 광산구에는 20명의 전문직위 공무원이 있지만 재난·안전 전문직위 신청 사례는 없을 정도로 해당 업무를 기피하는 분위기다.

또 다른 공무원은 “재난·안전 분야는 높은 전문성과 책임을 요구하면서 비상근무도 잦고 보상은 적다”며 “정부가 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인상과 승진 혜택 강화를 추진하지만 현장에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안전 업무도 대다수가 일반 행정직, 건축직, 토목직 등이 맡고 있다. 광산구에 방재안전직 공무원은 얼마 전 새로 들어온 신규 직원을 포함해 2명뿐이다. 방재안전직 확충도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오덕근 기자



훼손된 무등산너와나목장 생태습지 복원 전(왼쪽)과 후, 사진=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제공

무등산 너와나목장, 2년간 생태복원 성공 무등산자생종 심어 자연림 재현... 습지 복원

흑염소 목장으로 사용되면서 훼손된 전남 화순 무등산 너와나목장 부지가 2년간 식생 복원을 끝 마치면서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는 전남 화순군·읍 수만리 산 126 일대에 위치한 ‘너와나목장’(13만2420㎡)부지 복원을 이 달까지 마무리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부지는 1980년부터 약 40여년간 흑염소 사육 목장으로 쓰이면서 자연 생태계가 크게 훼손됐다.

당시 목장 부지에는 축사와 3km 길이의 경계 울타리가 세워져 있었다. 돼지풀(6만2980㎡), 애기수염(5만7648㎡), 환삼덩굴(4997㎡)과 같은 생태 교란 식물도 자라났다.

국립공원공단은 토지매수를 거쳐 지난 2023년부터 생태계 건강성 회복·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목표로 복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립공원공단은 목장 안에 설치된 축사·창고, 울타리, 지하수관정, 콘크리트 도로포장 등 8개 시설물(761t)을 철거했다.

또 무등산국립공원에 자생하는 상수리·신갈·졸참·산뽕나무 등 8종의 묘목 4000주를 심어 식생 복원을 진행했다. 여러 수종을 함께 심거나 작은 나무들을 뺄뺄하게 심는 방식 등을 통해 단기간 자연림 재현에 나섰다.

양사·과충류 등 다양한 야생생물이 살 수 있는 생태습지도 복원했다.

국립공원은 이 달까지 복원을 마치고 내년부터 복원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심은 나무에 물을 주고 외래종을 제거하면서 동식물들이 잘 서식하는지 살핀다.

국립공원공단 서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생태계 복원지가 다양한 야생생물들의 산란처·서식처 역할을 하도록 보존·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권철 기자

화재 28%가 ‘겨울철’ 발생... 소방청, 사망자 10% 저감 나선다

소방 당국이 화재 사망자 10% 저감을 목표로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소방청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2025~2026년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을 전국 소방관서에서 일제히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이듬해 2월)에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1만884건으로, 전체 화재의 28.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사망자는 전체의 34.9%로 다른 계절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옮겨붙은 강한 한파와 건조한 대기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열기 과부하와 난방용품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 사망자 10% 저감(131→117명)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대형 공사장, 물류센터 등을 대상으로 불시 소방 검사를 실시하고, 불량 사항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데이터 센터와 같은 국가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감지기·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하고, 연말연시 등 화재 취약 시기에는 전국 소방관서가 특별경계 근무에 돌입해 현장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겨울철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생활 속 화재예방 실천이 중요하다”며 “소방청은 국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대응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수년째 ‘국유지’ 통행 막고 회사 땅처럼... 행정처분 검토

A업체 ‘농로’ 국유지 양측 막고 무단 점유... 주민 원성

과거엔 도로 포장했다가 원상 복구... 구청 “위법 맞다”

있다. 한쪽 진입로에는 아예 문을 설치했고, 반대쪽 출입로에는 약 5m 길이의 스티로폼 패널을 세워 사실상 통행을 막았다.

A업체가 회사 소유 건물 2개 동 사이에 놓인 국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마을 주민들은 수백여 m를 돌아 지나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과거에도 A업체는 같은 자리에 불법 가

림막을 설치하는 등 통행을 원천 봉쇄했다. 당시에는 불법 점유한 도로 위를 무단 포장까지 했다가 적발, 서구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자진 철거했다.

마을 주민 김모씨는 “3년여 전부터 저런 행태를 하고 있으니 괴심할 따름이다. 업체 측의 일방적인 무단 점유로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고 토로했다. 다른

주민들도 ‘국가 땅을 누군가 일방적으로 점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건강도 좋지 못한 어른들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니 참 안타깝다’ 등 불만 소리를 냈다.

서구도 최근 현장 조사를 벌여 우선 A업체가 국유지 무단 점유 실태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A업체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 검토에 나선다.

서구 관계자는 “현장을 가보니 구조물 등이 설치돼 있어 국유재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단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조만간 A업체 관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뉴스

광주 한 농촌에 사업장을 꾸린 한 업체가 농로로 쓰이던 국유지를 수년째 무단 점유한 것으로 드러나 자치구가 행정 처분에 나선다.

2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서구 벽진동 한 마을에 건축물 2동을 지어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A업체 소유 건물 2동 사이로 도로 부지 3필지 중 1필지는 국유지다. 이 국유지는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손수레를 끌고 다니거나 농경지를 오가는 농로로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A업체는 수년 전부터 회사 소유 건물 2동 사이 국유지 내 진입을 가로막고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